

2012. 2. 6. Vol. 6

주간 농업·농촌 동향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어촌공동체회사, '11년도 사업추진실적 발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기획 정보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와 다보스의 대안
가락시장, 27년 만에 깨진 하역독점

농정 여론 동향

농촌 현장 여론(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농업 전문지 및 일간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거시경제 동향 정보

2012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 본 자료는 지난 2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12.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전월대비 0.5%)하며 지난달(4.2%) 보다 상승률이 낮아짐
 - 채소·과실 등 농산물과 공공서비스 요금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가공식품·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비 등은 전월대비 안정세
 - 신선식품(채소, 과실, 어개)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서민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
 - ※ 신선식품(전년동월비,%) : (11.8)13.9 (9)△4.24 (10)△10.1 (11)△4.2 (12)△3.6 (12.1)△2.5

<소비자 물가 동향>

단위: %

구분	1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전년동월비	3.4	3.9	4.1	3.8	3.9	4.2	4.5	4.7	3.8	3.6	4.2	4.2	3.4
전월비	1.2	0.7	0.4	0.0	0.0	0.2	0.5	0.7	△0.1	△0.2	0.1	0.4	0.5

- 농산물,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3.2%(전월비 0.2%) 상승하였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OECD 방식)는 2.5%(전월비 0.3%) 상승
 -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1.8)3.5 (9)3.3 (10)3.2 (11)3.5 (12)3.6 (12.1)3.2
 - ※ OECD방식 : 2.8 2.6 2.6 2.8 2.7 2.5
 - ∴ 근원물가: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

<2012. 1월 소비자물가 동향(%,%p)>

	소비자 물가 지수	농 축 수산물	농산물	공업 제품	가공 식품		전기 수도 가스	집 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공 식품				
가중치	1000.0	77.6	43.5	317.7	69.0	53.5	48.3	91.8	143.7	320.9
전월비	0.5	2.7	5.4	0.1	0.3	0.3	0.0	0.3	0.5	0.4
(기여도)	(0.48)	(0.22)	(0.24)	(0.03)	(0.02)	(0.02)	(0.00)	(0.03)	(0.07)	(0.12)
전년동월비	3.4	3.6	3.8	4.3	7.9	7.0	5.5	5.0	△0.7	3.4
(기여도)	(3.42)	(0.30)	(0.18)	(1.37)	(0.54)	(0.40)	(0.26)	(0.46)	(△0.10)	(1.10)

□ 농축산물 물가 동향

- 설 명절 농산물 수요증가와 계절적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세(전월비 2.7% ↑)
 - 농산물은 채소(전월비 8.7% ↑)·과실(7.7% ↑)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쌀은 산지가격 하락(0.2% ↓)과 정부보유미 방출로 하락
 - ※ 정부보유미 방출: 1.11일 '09년산 정부보유미 20만톤 공매(23,500원/40kg)
 - 축산물은 돼지고기(3.6% ↓), 닭고기(2.1% ↓)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월 보다 상승폭이 축소

<농축산물 가격추이 동향>

단위: %

구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농산물	전년동월비	15.9	0.3	△4.7	1.7	2.8	3.8
	전월비	11.0	△0.7	4.1	2.4	0.6	5.4
축산물	전년동월비	10.6	7.9	2.9	4.6	12.8	4.4
	전월비	2.8	0.8	6.5	1.2	7.0	1.0

□ 공산품 물가 동향

- 내구재(0.1% ↓)·출판물(0.1% ↓)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가공식품(0.3% ↑)·석유류(0.3% ↑) 가격 등이 상승

- 가공식품은 지난달 보다 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분유(8.3% ↑), 라면(2.3% ↑)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세를 지속
- 석유제품은 이란제재 등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와 국제제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0.5% ↑)·경유(0.3% ↑) 등을 중심으로 상승

<공산품 물가 동향>

단위: %, 달러/배럴

구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가공식품	전년동월비	7.0	7.3	7.4	8.2	8.6	7.9
	전월비	0.4	0.2	0.3	0.8	0.6	0.3
석유류 가격	국제유가	105	106	103	108	106	109
	국제 휘발유	120	122	120	111	112	120

□ 평가 및 전망

- '12.1월 소비자물가는 설 명절 수요증가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공급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세를 주도
 - 추가인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인상도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
 - 다만 올해 설 물가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정부의 선제적인 성수품 물량공급 확대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향후 이란제재 등 중동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유럽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겨울철 한파, 폭설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도 예의 주시할 필요

주요 농정 이슈

농어촌공동체회사, '11년도 사업추진실적 발표

※ 본 자료는 2월 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사업목적

- 농어촌 주민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1,350백만원)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등 4개 유형별 우수사업 선정,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 : '11년 54개소 1,3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135백만원)
 - 창업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공동체회사 역량강화 지원, 공동체 회사의 조기정착 및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 ※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보급, 워크숍·세미나 개최, 창업안내책자 발간·배포 등

□ 주요 사업성과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결과 총 매출액 34.4%, 고용인원 18.5% 증가 등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 기여
 - 매출액은 '10년도 622억원에서 '11년도 836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고, 이는 신제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형

할인매장 등과의 직거래를 통해 영업비용을 절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고용인원은 '10년 2,185명에서 '11년 2,589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는 회사평균 4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귀농·귀촌인력 142명 채용하여 마을에 활력 증진
- 방문객은 '10년 24만명에서 '11년 33만명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객관리·체험·예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학습·수학여행 유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54개소 추진실적 분석결과('12.1월)>

구분	'10년 (A)	'11년 (B)	증 감		비 고
			B-A	(%)	
○ 매출액(백만원)	62,188	83,565	21,377	34.38	
○ 고용인원(명) (귀농·귀촌인력)	2,185 (114)	2,589 (142)	404 (28)	18.49 (24.6)	
○ 방문객(명)	241,325	327,164	85,839	35.57	체험고객기준(단순방문제외)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례는 부록 참고

부록

<우수사례: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 의사 개요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 671
- 조 직 : 법인회원 65명(귀농인 6명), 11개 작목반 및 500여농가 참여
- 연 혁 : '02년 법인 설립, '06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11년 시설원예전문생산단지,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대상 선정
- '11년 방문객수/소득액 : 20천명/71억원('10년 54억 대비 31%증가) 인증 획득 지원

□ 주요 성과

-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작목반을 조직화하여 지속적인 단결을 통해 매출신장과 주민소득증대 노력
- 설향, 장희 등 다양한 딸기제품에 대하여 GAP인증, 친환경무농약 인증, 세이프슈어 인증을 받아 녹색농업 실현
- 미생물 배양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농가에 미생물을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집하장 운영 및 공동선별작업으로 균일한 상품 출고
- '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경영전략 컨설팅을 실시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직접 딸기를 납품하고 있으며, '11년 12월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주요 농정 이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 본 자료는 1월 3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한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개요

- (사업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 내용)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 대상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 주요 내용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12년부터 시행
 -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어 지원 확대를 추진
-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법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
 -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인상
 -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인상
-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하여 지급

기획 정보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와 다보스의 대안

※ 본 자료는 1월 25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와 다보스의 대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

- (국제적 무역불균형 확대)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지속되는 국제적 무역불균형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격차 2010년 이후 확대 추세
 -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로 글로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환율전쟁 심화
- (글로벌 재정위기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였고 심지어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
 -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
 - ※ 재정적자 비율: ('07) 2.8% → ('11) 9.7%
 - ※ 부채비율: ('07) 62.3% → ('11) 100.1%
 -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
 - ※ 재정적자 비율: ('07) 1.9% → ('11) 36.1%
 - ※ 부채비율: ('07) 6.1% → ('11) 67.4%
- (글로벌 소득 양극화 심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은 사회적·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 심화
 - ※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지니계계수는 나빠져 소득불평등 현상 심화

- 세계 인구의 0.5%가 세계 부의 38.5%를 소유한 반면, 세계 인구의 67.6%는 세계부의 3.3%를 소유하는데 그침.
- (글로벌 청년실업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고용시장의 불균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늘고 있음.
- 세계 청년 실업률: ('07년) 11.8% → ('10년) 12.6%, 0.8%p 증가

□ 2012 다보스포럼의 대안 제시

1. 4가지 디스토피아 대안 모델

- (성장과 고용 모델) 소비와 부채 위주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산업모델을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전환
- (리더십과 혁신 모델) 주요 선진국과 냉전시대 이후 조직된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신흥국과 민간 기구,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켜야 함.
- (지속가능성 자원 모델)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의 행동과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것임.
 - 정부, 산업, 기업 사이에 협동과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
- (사회적·기술적 모델) 생명과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의 다음 물결은 생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임.
 -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규범의 필요성 강조

2. 6대 도전 과제

- (글로벌 경기침체) 유로존 부채 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무역불균형 심화, 실업률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될 전망
- (글로벌 파워 시프트와 신흥시장) 경제적, 정치적 파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함.
 - 과거 세계의 권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파워가 중국, 남아프리카, 브라질을 주축으로한 지역 패권주의로 이동 예상

- 무역, 금융 등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의가 부상하고 있음.
- (동반성장과 고용창출) 동반 성장의 기초는 고용
 - 실업문제는 2012년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임.
- (정치적 신념과 다수 이해관계자 통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와 공공기관의 불신 증가
 - 현재 경제 위기는 금융시장과 경제의 국가간 연결성이 높은 반면, 정치적으로는 연결성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
- (천연자원의 희소성과 기후 변화) 천연자원과 기후변화가 경제 발전과 성장에 끼치는 영향 증가
 - 경제성장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식량, 에너지, 수자원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와 통합된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
- (디지털 혁명과 진화)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행은 인간사회에 위험과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줌.
 -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사이버 범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온라인 범죄행위를 초래,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범이 필요

기획 정보	가락시장, 27년 만에 깨진 하역독점 ... 하역업무 체계 달라지나
-------	--

□ **아역체계의 유형별 특징**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별로 차이는 없으나 대부분 하역 노동조합, 용역회사, 자체하역반 등이 담당

<하역체계의 유형별 특징>

하역체계 유형	하역비 징수방법	특징
하역노조	정액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원 결속력이 강함. 하역원 입출시에 권리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하역기계화시에도 누군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인원 축소 불가능
용역회사	정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금액의 일정률로 하역비를 징수 하역 기계화시 신속적으로 인원 축소 가능
자체하역반	정액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원 결속력이 느슨함. 하역원 입출시에 권리금 거래 없음.
법인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비 절감유인이 큼. 하역인원 감소분만큼 기계 투입 가능 프리미엄 거래를 없앨 수 있음.
개인사업자	정액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원 각자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역인원 축소가 원활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중앙도매시장(가락동 도매시장) 대부분 하역노조가 전담,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노동조합 외 다양한 형태의 하역주체가 하역업무 담당하고 있어 오히려 가락동 도매시장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여 주고 있음.

□ **가락동 도매시장 하역노조의 구조적 문제점**

○ 하역조직의 폐쇄성, 독점적인 하역작업, 하역비 결정의 객관성 결여, 하역비 부당 징수 등의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하역노조와 생산자, 유통인간의 대립과 충돌이 자주 발생

- 가락시장 깎임 하역비 형평성 논란에 갈등 ‘팽팽’(농민신문 2012.1.30)
- 지난 5일 평소 하역비가 높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출하자가 5톤 트럭 3대 분량의 고구마가 도착하자 직접 하역하는 과정에서 향운노조 관계자들이 집단 반발(중앙일보 2012.1.31)
- 가락시장 하역노조 “포장대와 수준에 맞춰야” 도매법인·농가·출하주 “과도한 요구” 반발(농민신문 2011.10.21)

□ **가락시장, 27년 만에 깨진 하역독점**

- 그동안 서울 가락시장 하역노조가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독점적 근로자 공급권 행사
 - 지난해 비상장품목 농수산물에 대한 하역 문제로 많은 중도매인들이 하역 노조와 갈등. ‘하역은 하역노조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농안법’ 어디에도 없는데, 하역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독점권을 주장해 하역노조를 상대로 소송 진행
- 비상장품목중도매인정산조합과 하역 용역업무를 체결한 업체가 지난해 하역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하역노조의 근로자 독점권 부당”, 비상장품목 중도매인 “직접 진행할 것” 등 승소 결정.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하역노조가 아닌 외부용역업체가 첫 작업 시작
 -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측은 상장품목에 비해 차별대우와 하역노조측에 수차례 업무 개선과 협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 쌓여 결국 폭발

□ **아역업무 체계 개선 모색**

- 법원에서 하역업무의 독점권 불인정함에 따라 상장품목 중도매인·도매법인도 ‘축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노조에 서도 하역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중앙일보, 전창곤 선임연구위원)”이라 예측. 이번 계기로 하역노조가 체결 개선과 더불어 하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과 크게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 규제완화 요구

-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원부재료로 소규모 농산물 제조 가공을 하는 경우 제조업 허가 내지 신고를 해야 함. 소규모 가공은 농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 <최시훈, 부산 기장>
-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제조 공장'으로 분류해 여기서 나오는 배출수를 '생활하수'가 아닌 '폐수'로 보아 복잡한 폐수처리시설과 유지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임충빈, 경기 안성>
- 첨가물이 없는 단순한 농산물 가공은 간단한 절차와 신고만으로 농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완화해 주기 바람. <박종임, 충북 괴산>
- 농산물을 가공하여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함. <최정순, 전남 진도>

□ 안우 사육기반 약화 우려

-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소 사육기반 붕괴가 우려됨.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재월, 전남 고흥>
- 소값 폭락에 따른 한우감축을 위한 도태시 우량우 보존 대책으로 혈통 검사를 통해 우량우를 가려내고, 초음파검사를 통해 후대 저질등급이 예상되는 소는 도태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변해동, 강원 홍천>
-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 당국에 신고만 하면 도축할 수 있도록 도살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기 바람. <정순탁, 경남 양산>
- 산지 소 가격은 내렸는데 고기값은 내리지 않고 있음. 이렇게 불합리한 유통 체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임. <최영호, 충남 부여>

□ 농업 인턴제도 대상 연령 등 확대 요망

- 농업인턴 제도가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대규모 농장 경영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귀농 촉진 및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만 44세 이하로 되어있는 농업인턴 대상을 만 50세 이하로 연장해주고, 가족 귀농도 인턴제도 속에 포함시켜 부부가 함께 인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김정오, 경남 거창>

□ 마을 복지시설 운영 개선 여론

- 복지회관의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들 이어서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마을 복지회관 도우미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도 촉진되고 마을회관 운영도 개선될 것임. <박향숙, 전남 완도>
- 현재 농촌지역에 1/3은 독거노인으로 겨울철 난방이나 식생활문제가 심각함. 동절기만이라도 독거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 마을마다 숙식이 가능한 공동시설물 운영을 지원해 주기 바람. <김현욱, 전남 곡성>

□ 기타

- 농업인 안전공제 제도 가입조건 완화 필요
 - 농기계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이 1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함. <김경수, 전남 완도>
- 농산물을 장바구니 물가지표에서 삭제해야
 - 물가정책 일환으로 농산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장바구니 지표가 있는데 이는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 삭제해야 마땅함. <김용덕, 경기 남양주>
-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조사 등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하여 농가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 <김병철, 경남 김해>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및 일간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지난 1월 30~2월 3일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임.

□ 1인당 쌀 소비량...70kg대 붕괴 위기

- 농부의 여러 차례 쌀 소비 확대대책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감소 추세 가속화. 통계청에 따르면 2011 양곡연도(2010.11~2011.10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71.2kg(1년 전 72.8kg)으로 1년 전 보다 1.6kg감소.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요인. 기타 양곡 소비량도 8.5kg(2010)→7.4kg(2011)으로 1.1kg 감소

자료 : 농민신문(2012.2.3).

□ “잇단 FTA로 농어민 개방 피로도 가중 공포 확산”

- 1.31일 한·중 FTA 토론회 개최, 국내 여론수렴과정에서 착수한 가운데 한·중 FTA로 인해 농업에 막대한 피해 예상 우려 고조. "FTA 체결로 관세철폐 시 농산물 수입 급증, 축산물 위주의 한·EU FTA나 육류 및 과일류 위주의 한·미 FTA보다 광범위한 피해 우려" 강조(어명근 선임 연구위원). "신선채소 피로?국내 활어시장 잠식당할 수도, 잇따른 개방으로 공포감 조성(농식품부 김진진 과장)" 농민단체, "정부 피해산업 여론수렴 외면" 반발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2.2).

□ “日 쌀갤러리로 소비속진 효과 봤다”

- 농협경제연구소, 농협의 ‘쌀 박물관’ 지난달 초 개관 관련 일본농협의 ‘쌀 갤러리’ 운영사례 견취할 때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국민건강 증진, 올바른 식문화 인식시키는 데 기여 클 듯.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쌀의 가치 알리는 데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과 연계 운영 필요

자료 : 농민신문(2012.2.1).

□ 중앙의 “무상지원” -정부 “안된다” 방안 마련 명령선

- 정부 농협 2조원에 대한 현물출자 지지부진. 농협은 가치가 높은 현물의 무상지원을 원하는 반면 정부는 무상지원을 반대하는 입장, 또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현물출자 지원 계획이지만 농협은 중앙회를 통해 받겠다는 현물출자 지원 주체 놓고도 시각 달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약 한달여 앞두고 있지만 이견 조율 쉽지 않을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30).

□ 가락시장 하역비 영평성 논란에 갈등 ‘팽팽’

- 최근 갯잎 출하농가, 가락시장 하역비 적용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하역노조측에 하역비 인하 및 부당 징수한 2억 2,275만원(연 270만상자 출하물량 기준) 하역비 환불 요구. 반면 하역노조측, 2009년 이전 하역비 인상협상 시 정해진 것으로 “불가능” 고수하며 갯잎 농가의 “상경투쟁 등 강경 대응”으로 갈등 고조.

자료 : 농민신문(2012.1.30).

연구 지원 정보

2011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 본 자료는 1월 3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조사대상기간 : 2010. 11. 1 ~ 2011. 10. 31 (2011 양곡년도)
- 조사 대상
 - 가구부문: 1,559가구(농가 560가구, 비농가 999가구)
 - 사업체부문 : 3,111개 사업체
 - 식료품제조업(10)과 음료제조업(11)에 해당되는 사업체
- 조사 내용
 - 가구부문 : 쌀, 보리쌀, 밀가루, 잡곡류, 두류, 서류별 소비량, 외식, 결식, 집대 횟수
 - 사업체부문 : 쌀(잡쌀 포함) 소비량

□ 가구 부문 양곡 소비량

1. 쌀 소비량

- 2011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kg으로 전년도72.8kg에 비해서 1.6kg 감소(△2.2%)
 -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짐에 따라 가구부문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0년 전인 2001년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7.7kg 감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증감 추이>

단위 : kg, %

구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비량	88.9	78.8	76.9	75.8	74.0	72.8	71.2
전년대비 증감률	-5.0	-2.4	-2.4	-1.4	-2.4	-1.6	-2.2

- 농가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15.3kg으로 전년대비 3.2kg(△2.7%) 감소하였고, 비농가는 68.3kg으로 전년대비 1.5kg(△2.1%) 감소
- 한편, 1인당 1일 평균 쌀 소비량은 195.0g으로 전년대비 4.6g(△2.3%) 감소

2. 양곡 소비량

- 2011양곡년도 가구부문의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78.6kg으로 전년대비 2.7kg 감소(△3.3%)
- 1인당 양곡소비량(78.6kg) 중 쌀은 전체 양곡소비량의 90.6%, 기타 양곡은 7.4kg으로 9.4%를 차지함

<곡류별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 kg, %

구분	양곡 계	쌀	기타 양곡					두류	서류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		
2001	101.2	88.9	12.3	1.7	3.0	0.9	3.3	3.4	
2006	87.2	78.8	8.4	1.2	1.3	0.5	3.0	2.4	
2007	84.8	76.9	7.9	1.1	1.3	0.5	2.7	2.3	
2008	83.9	75.8	8.1	1.1	1.4	0.5	2.3	2.8	
2009	82.3	74.0	8.3	1.2	1.5	0.5	2.3	2.8	
2010	81.3	72.8	8.5	1.3	1.5	0.7	2.3	2.7	
2011	78.6	71.2	7.4	1.3	1.4	0.6	1.8	2.4	
전년대비 증감률	-3.3	-2.2	-12.9	0.0	-6.7	-14.3	-21.7	-11.1	

- 농가의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27.4kg으로 전년대비 6.0kg(△4.5%) 감소하였고, 비농가는 75.4kg으로 전년대비 2.4kg(△3.1%) 감소

- 용도별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을 보면, 주식용 76.3kg, 떡·과자용 1.3kg, 장류용 0.5kg, 기타음식용 0.5kg으로 전년대비 대부분 감소
- 연간 1인당 양곡 소비량에서 각 용도별 구성비는 주식용 97.1%, 떡·과자용 1.7%, 장류용 0.6%, 기타음식용 0.6%로 주식용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다른 용도들의 구성비는 감소하거나 동일

□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 2011양곡년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에서는 650,819톤의 쌀을 제품 제조과정에 소비
 - 식음료품 등의 원료가 되는 주정제조업이 243,949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37.5%를 차지하여 가장 쌀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며
 - 그 다음으로 떡류제조업 147,270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99,209톤, 탁주 및 약주 제조업 59,052톤 순으로 이들 4개 산업의 쌀 소비량이 전체 사업체 소비량의 84.4%를 차지함

<주요 산업별 쌀 소비량>

	소 비 량(톤)	구 성 비(%)
총계	650,819	100.0
주정 제조업(11121)	243,949	37.5
떡류 제조업(10711)	147,270	22.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99,209	15.2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59,052	9.1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24,938	3.8
장류 제조업(10743)	18,026	2.8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30)	13,377	2.1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9,669	1.5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10713)	7,072	1.1
그 외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28,257	4.3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